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96호
2021.3.8

정책동향

- 2021년 공정위 주요 업무계획과 정책 과제
- 민간 자본을 활용한 노후 시설물 투자 방안

산업정보

- 건설회사, 스마트홈 플랫폼 개발 경쟁 치열
- 건설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건설논단

- 시험대에 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2021년 공정위 주요 업무계획과 정책 과제

- 계속된 ‘공정’, ‘상생’ 강조, 산업 특성 고려한 세밀한 설계 이어져야 -

■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한 6가지 핵심 추진과제¹⁾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비전으로 한 6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함.
 - 주요 추진과제는 ①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② 甲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③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 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④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 관행 형성, ⑤ 소비자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⑥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임.
- 첫 번째 과제로 디지털 전환 경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설정함.
 -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관련 법률제정 및 개정, 취약계층 보호 기반 강화, 소비자의 안전한 비대면 거래 환경 조성,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의 경쟁 제한 행위에 관한 효과적인 규율을 통해 시장 혁신 동력 유지를 계획함.
- 두 번째 과제로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을 설정함.
 - 협력적 거래기반 구축, 공정한 거래대금의 결정과 신속한 지급 거래환경 조성, 그리고 코로나 19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엄정 대응을 계획함.
 - 대금 미지급과 산업재해 관련 비용 전가 등 법 위반 우려가 큰 건설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 세 번째 과제로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 구조와 거래질서 정립을 설정함.
 - 건전한 거래문화 확립, 편법적 경제력 집중 억제, 투명한 소유·지배 구조 유도, 그리고 규제 합리화를 위한 관련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
- 네 번째 과제로 혁신 촉진을 위한 시장환경 및 거래 관행 형성을 설정함.
 - 혁신기업에 관한 투자 촉진과 경쟁적 시장구조 확립, 경쟁 제한 행위 엄단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그리고 경쟁 규범을 준수하는 유인구조 형성을 추진할 계획임.

1) 본 고는 2021년 1월 21일 발표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보도참고자료”를 요약·정리함.

<그림 1> 2021년 핵심 추진과제

비전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경제를 경제 전반에 착근시키고 디지털 경제에까지 확산 ◇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장되는 시장환경 조성 ◇ 국민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공정문화 정착 	
	핵심과제	실천과제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공정경제를 위한 기본 규범 정립 ▶ 경제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온라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 디지털 경제에서의 혁신경쟁 보호
	甲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상생기반 강화 ▶ 율의 협상력 제고 등 협력적 거래기반 구축 ▶ 정당한 거래대금이 지급되는 환경 조성 ▶ 코로나19에 편승한 불공정행위 대응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 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및 일감 나누기 확산 ▶ 개정 기업집단 법제의 안정적 시장 착근 유도 ▶ 시장압력을 통한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 ▶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합리화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가 촉진되고 기술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 ▶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및 효과적 M&A 심사 ▶ 경쟁 제한 행위 엄단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 경쟁 규범을 준수하는 유인구조 형성
	소비자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강화 ▶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알 권리 적극 보장 ▶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피해 예방 ▶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 증진 기반 강화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 신속한 시정·피해구제를 위한 집행 체계 구축 ▶ 공정거래정책 추진 역량 강화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2021),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다섯 번째 과제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설정함.
 - 소비자 측면의 정책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와 권리 강화, 불법 행위에 관한 집중 점검, 피해 예방 및 구제, 그리고 권익증진 기반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
- 여섯 번째 과제로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를 계획함.
 - 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 금액 산정시 감정평가 시행 근거 마련과 분쟁 당사자 외 발주자에게도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관련 시스템과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 강화를 계획함.

■ 건설산업에 주는 시사점

-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는 하도급 종합 대책 마련 및 추진과 법 집행 강화에 기반을 둔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업무계획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 가능함.
 - 건설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계속된 관련 규제 강화 및 정책 추진에 따라 산업 내 자정 노력이 확산됨. 이로 인해 최근 건설업 내 하도급 불공정거래 제재 건수는 계속 감소(2017년 16건 → 2020년 6건)²⁾하였으며, 공정위 또한 이를 관련 정책 추진의 결과로 자평하고 있는 상황임.
- 산업 내 이러한 환경 조성이 일정 수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향후 공정위는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규제 비용 절감과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그럼에도 올해 역시 계속된 규제 강화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쉬움.
 - 최근 공정위의 입안 정책을 살펴보면 갑을 관계의 틀 내에서 원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며, 일례로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편향된 조사로 지적되었던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개선 역시 이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사업자의 계속된 피해가 불가피함.
 - 더구나 올해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오히려 산업재해 관련 비용 전가 등 원·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금지급 실태에 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계속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과 산업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공정위는 향후 건설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 추진에 있어 원·하도급 기업 간 스스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처벌 위주의 하도급 정책 추진보다는 유인책 부여 방향에 기반을 둔 정책방안 마련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일례로 지난 2019년부터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하도급계획서 제출 등 하도급대금 산정에서부터 지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공정행위 예방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공공공사보다 민간공사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공기 연장에 따른 대금 지급 지연·미지급 상황 발생시 현행과 같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공사대금 지급기일 연장 및 어음 지급 등을 허용하는 유연한 제도 도입으로 원도급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김화량(부연구위원 · hrkim@cerik.re.kr)·전영준(연구위원 · yjjun@cerik.re.kr)

2) e대한경제, “상생 자리 잡은 건설하도급 문화”, 2021. 1. 6일 자 참조.

민간 자본을 활용한 노후 시설물 투자 방안

- 시설물 노후화 가속, 민간 재원을 통한 새로운 투자 모델 제시해야 -

■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

● 최근 국내 주요 기반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가령 2020년도 말 기준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시설물은 전국적으로 1만 8,774개에 이르는데, 이는 2011년도 말의 9,567개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임.

<표 1> 노후 공공시설물 증가 추이

(단위 : 개)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건축물	5,134	6,731	8,143	9,426
교량	2,515	3,217	4,331	5,630
하천	641	779	976	1,277
터널	393	458	574	636
상하수도	134	220	310	404
댐	302	333	363	389
옹벽	210	270	321	367
절토사면	74	115	235	340
항만	46	57	70	85
공동구	3	4	7	9
기타	115	154	183	211
계	9,567	12,338	15,513	18,774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가공.

■ 노후 시설물 재투자를 위한 정부 예산 역시 크게 증가

●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매년 5조원 내외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³⁾

- 실제로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 중 안전 예산은 5.9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원이 증가했으며,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 대비 비중 측면에서도 전년의 9.6%에서 10.3%로 0.7%p 증가함.

■ 정부 예산만으로는 증가하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적정 투자를 기대하기는 곤란

● 정부 예산 투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빠르게 늘어나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재투자 비용을 예산만

3) 기획재정부(2020. 9. 1),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정부발표자료 p.28 참조.

으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실제로 최근 한 연구⁴⁾에 따르면 도로, 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에서만 2020년부터 매년 5조원 이상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며, 2030년에는 연간 발생 비용이 10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됨.

- 특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빠르게 악화되는 국가채무로 인해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제약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⁵⁾

■ 노후 시설물이 가진 '비수익성'으로 민간 자본 활용이 제약

- 정부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중의 민간 자본을 노후 시설물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재투자가 시급한 노후 시설물들의 대부분이 투자에 따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음.
 -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는 시설물을 전제로 하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민간 투자자의 수익을 보전해줘야 하는 문제⁶⁾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이 곤란함.

■ 민간 자본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 모델 제시

- 수익성이 있는 노후 시설물과 그렇지 않은 노후 시설물을 적절히 결합(bundling)한 사업구조의 설계를 통해 노후 시설물로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정부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의 경우 개발에 따른 적지 않은 수익이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캄코나 LH를 통한 위탁개발방식과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공공주택 건설방식으로만 추진되고 있음.⁷⁾
 - 따라서 이들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복합개발의 내용 속에 일반 분양이 가능한 건축물 건설사업과 비수익형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포함시켜 '공모형 PF 사업'을 결합한 형태로 추진할 경우, 노후 시설물에 대한 민간자본의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임.

김정주(연구위원 · kjj@cerik.re.kr)

4) 김주영(2016), 「장래 교통 SOC 유지보수 소요예산의 전망」, 한국도로학회지 18(4)의 내용 참조.

5) 매일경제, 「[단독] '이 빚 누가 다 갚나...' 국가채무 내년 1000조, 9년 후 2000조」, 2021. 2. 9일 자 참조.

6) 노후 시설물의 경우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BTO 방식으로는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움. 때문에 현행법상 BTL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시설물 특성상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민투법」에 따른 총한도액 설정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됨.

7) 기획재정부(2018. 1),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안)」, 정부발표자료 내용 참조.

건설회사, 스마트홈 플랫폼 개발 경쟁 치열

- 기업별로 독자적 플랫폼 제공,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단일화 노력도 필요 -

■ 스마트홈 주도권 경쟁 치열, 기업별 독자 플랫폼 제공

- 스마트홈은 입주자들의 거주 편의성을 위하여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다양한 정보통신 제품들을 주택에 적용함.
 - 정보통신 제품들은 다수의 정보통신기업이나 가전기업들에 의해서 공급되는데, 이 제품들이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보다 상호연계되어 작동할 때에 보다 효과적으로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개별 스마트홈 제품(기기)들을 연계하여 통제하기 위한 체계로서 스마트홈 플랫폼이 일정한 표준으로 작동하며 해당 플랫폼의 표준에 따르는 제품들과의 연동이 가능한데, 기업별로 독자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 한 주택 내에 복수의 플랫폼이 구축되는 현상들이 발생함.
 - 국제적인 IoT 표준화를 위한 기구로서 2016년 2월에 설립된 OCF(Open Connected Foundation)과 2019년 12월에 발족한 CHIP(Connected Home over IP) 등이 있음.
 -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각 제품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일되어 제공되면 스마트홈 구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플랫폼의 주도권을 가진 기업에 의해서 스마트홈 시장이 독점되는 등 그 지배력이 달라질 수 있음.
- 통일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사용자와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시장 주도권 경쟁에 있는 기업들은 플랫폼 개발과 주도권 경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

■ 건설회사의 스마트홈 플랫폼 개발 동향

- 현재 많은 국내 건설회사가 스마트홈을 공급하고 있음. 회사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는 고유 브랜드가 있고, 일부 기업들은 스마트홈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음.
 - 삼성물산은 ‘래미안 A IoT 플랫폼’을 개발하였고, 현대건설은 ‘하이오티’, GS건설은 ‘자이 AI 플랫폼’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DL이앤씨(대림산업)는 ‘스마트홈 3.0’으로 업그레이드하였고, SK건설은 스카이(SKAI, SK View AI Home Service)를 개발, 대우건설은 스타트업 지분매입을 통해 스마트홈 플랫폼사업에 진출하였음.
- 건설회사의 스마트홈 플랫폼은 각 사가 강조하는 서비스나 기능을 적용하여 고유의 브랜드

를 강화함으로써 분양경쟁력을 높이거나, 세대별로 수집되는 정보들을 빅데이터화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목적 등으로 구축하고 있음.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사의 플랫폼을 타사에 제공하여 별도의 수익을 기대하기도 함.

- 플랫폼은 서비스나 기능 등이 구현되는 바탕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기기나 장비, 데이터들이 연계되는 표준 역할도 하는데, 건설회사가 개발하는 플랫폼은 정보통신회사나 가전회사가 공급하는 스마트홈 기기들과 표준이 달라 직접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각 공급사의 플랫폼을 재연결하는 방식이 적용됨.

■ 경쟁 생태계를 위한 다양화 필요하나,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단일화도 중요

- 일반적으로 스마트홈 플랫폼은 스마트홈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장비 간의 원활한 운용을 목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자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임.
 -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스마트홈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투자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스마트홈 거주자들의 생활 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스마트홈 인공지능을 강화하고 스마트홈 서비스를 보완하는 접근은 필요해 보임.
 - 건설회사 스마트홈 플랫폼이 안고 있는 문제는 전문성과 투자 여력이 스마트홈 공급 기업들과 차이가 있어 플랫폼의 완결성이 취약해지는 점과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선에 따르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임.
 - 다양한 스마트홈 장비들을 연계·운영하기 위하여 복수 공급사들의 플랫폼들을 연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비용효과와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완 방안이 필요함.
- 스마트홈 거주자들이 스마트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개의 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거주장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거주자와 인터페이스가 발생하는 접점을 최대한 단순화하기 위해서 건설회사와 공급회사 간의 협업을 통한 플랫폼 단일화 노력이 필요함.
- 각 기업 간 특성화와 다양화에 따른 선의의 경쟁 생태계를 위해서 다수의 플랫폼이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거주자들과의 접점을 단일화 또는 최소화하는 것은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완결성과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임.

김우영(연구위원 · beladomo@cerik.re.kr)

건설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활동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분야에 집중 -

■ 「2020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발간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설문조사하고 조사에 답한 245개사(사회공헌 지출 규모를 공개한 기업은 220개사)의 응답과 해당 기업이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통합보고서 등을 분석한 「2020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를 발간함.
 - 220개사가 2019년에 지출한 사회공헌 비용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2조 9,928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비율은 0.2%, 세전이익 대비 비율은 4.0%임. 지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예년과 다르지 않게 '취약계층 지원', '교육·학교·학술', '문화예술 및 체육' 등의 비중이 여전히 높음.
 - 분석에 포함된 건설기업의 수는 16개로 2017년 분석의 13개, 2018년 분석의 15개에 비해 증가함.

〈표 1〉 주요 기업들의 사회공헌 비용 추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분석대상 기업 수	198개	206개	220개
사회공헌 지출 규모	2조 7,244억원	2조 6,061억원	2조 9,928억원
매출액 대비 비율	0.15%	0.16%	0.2%
세전 이익 대비 비율	2.2%	1.9%	4.0%
포함 건설기업 수	13개	15개	16개
분야별 지출	'취약계층 지원'(31.3%); '문화예술·체육'(21.6%); '교육·학교·학술'(13.1%); '의료보건'(9.4%)	'취약계층 지원'(37.6%); '교육·학교·학술'(14.7%); '문화예술·체육'(11.0%); '창업 지원'(10.9%)	'취약계층 지원'(33.5%); '교육·학교·학술'(10.6%); '문화예술·체육'(9.2%); '지역경제 활성화'(5.7%)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20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2020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2020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 건설기업의 주요 사회공헌 사례

- 건설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사회공헌 활동,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등에 집중됨.
 - ① 대보건설
 - 자사 소유 골프장에서 바자회와 콘서트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바자회 수익금은 지역 복지단체에 기부함.

② 대우건설

-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협력사와의 거래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이행하고 사이버 감사실과 익명의 제보 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방비하고 있음.
-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비영리법인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단열작업, 도배·장판·창호·싱크대 교체, 전기공사 등을 실행함.

③ 부영그룹

- 국내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비를 보조하는 장학사업을 수행함.

④ 삼성물산

- 상호 신뢰의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사와 소통 콘서트를 개최해 비전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함.

⑤ 삼성엔지니어링

- 국내외 청소년을 초청해 환경 및 공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주니어 엔지니어링 아카데미’를 개최함. 해외에서는 임직원들이 방문해 강의하는 ‘찾아가는 엔지니어링 아카데미’를 운영함.

⑥ 중흥건설

- 협력사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술개발과 소통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주기적으로 교류함.

⑦ 포스코건설

- 부서와 지역아동센터 간 1:1 결연을 통해 임직원이 센터를 방문,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요리, 보드게임, 스포츠 등 함께 하는 ‘One & One’ 프로그램을 운영함.
-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현장 시공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건설 분야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함.
- 협력사들의 적정이윤 확보로 건강한 건설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준금액을 설정, 기준금액 미만 입찰자를 제외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함.

⑧ 현대엔지니어링

- ‘디딤돌 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쪽방촌 주민들이 저가의 월세로 지낼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리모델링으로 기존 주거환경을 개선함.
- 협력사와 함께, 흑한기 쪽방촌에 물품을 지원하고 굿월스토어에 물품을 기증하는 캠페인에 참여함.

- 건설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취약계층이나 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과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추구하고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분야에 집중됨.
- 타 산업의 기업들이 상당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과정에서의 친환경 가치 실현, 준법경영 강화, 고객·근로자 안전강화,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건설기업의 관심 제고가 필요함.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

시험대에 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대응은 두 가지 방향에 집중되고 있다. 백신의 신속한 공급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반한 강력한 방역정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대응이 그것이다. 정부에서 말하듯이 둘 간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당장의 위기 극복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또 다른 위기, 즉 세계 각국의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경제환경 도래에 따라 다른 어느 때보다 세계 경제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투자의 회복 기미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낙관론적 시각은 다른 어느 때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고용시장의 여건은 악화되어 있으며,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여전히 불투명하게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 4분기 연속 악화된 소득분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우리 경제가 가진 성장잠재력은 시험대에 놓여 있다. 급변하는 경제, 사회 상황은 또 다른 성장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우리 경제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표출될 우려도 함께 갖고 있다. 올 한 해가 중요한 이유다. 중기적으로 경제 회복을 달성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선 먼저 산업 정책의 내실화를 다지고,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컸다. 그러나 이들 산업이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다양한 산업 간·기술 간 융복합 그리고 대외경쟁력 확보가 오랫동안 논의돼 왔지만, 아직까지 요원하다. 보다 실질적인 산업의 융복합, 기술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전략적 육성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친환경 등 수요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적 요인과 수요에 맞춘 신성장 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발전 방향 제시가 가장 중요한 산업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 규제 혁신은 정부마다, 또 경제 위기 때마다 첫째로 거론되는 대응책이었다. 그러나 매번 그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적극적인 규제 혁신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5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기업들이 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면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과감성과 시의성도 중요하다. 과감성이란 규제 개선의 주체, 내용, 협의 과정 등 전체에 있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시의성은 규제 개선의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0년을 '잃어버린 1년'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과거는 늘 현재의 시험 무대였다. 우리 경제는 교훈을 얻었고, 방역시스템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했다. 올해는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넘어 코로나19 극복과정을 한국의 내적·외적 성장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아주경제, 2021.2.23>

김영덕(연구본부장 · ydkim@cerik.re.kr)